

현안과제연구
2010. 9

충청광역경제권 체제 구축방안

연구수행 : 백 운 성

충청광역경제권 체제 구축방안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책임연구원

차 례

1. 광역경제권의 개념과 세계적 동향
2. MB정부의 5+2광역경제권정책
3. 광역경제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4. 지속가능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제언

1. 광역경제권의 개념과 세계적 동향

- 세계적으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 추진
 - 공간의 광역화, 지식기반, 서비스, 융·복합 등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의 공간적 생태계(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반
- 광역경제권정책은 행정구역이나 체제를 유지한 채 산업경제적 성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정책
 - 오마에 겐이치 ; 산업클러스터와 혁신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적정 광역경제권의 규모 (Critical mass)는 500만~2000만명
 - 마이클 포터 ; MCR(megacity Region)이란 용어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대도시(산업집적지 등)의 역할을 강조

일 본	47개都道府縣→8대광역지방계획구역(국토형성계획법근거)
프랑스	96개 데파르트망 → 22개 레지옹 → 6대 광역권 (2020 프랑스 계획)
독 일	16개주→9개주
영 국	42개 카운티→ 9개 광역경제권 (RDA법 근거, 평균인구 556만)

⇒ 광역경제권은 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있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중소도시·농어촌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함

2. 실용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

1) 도입배경

- 16개 시·도 단위의 분절적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원의 지역간 활용과 상호보완적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
 - 글로벌화, 광역화 등 세계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광역경제권(5+2) 정책 추진
 - 초국경적 경제통합에 따른 글로벌 장소 경쟁에 대응
 -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과 상생으로 국토 성장 잠재력 극대화
- ⇒ 광역경제권(5+2), 기초생활권(163), 초광역개발권(4+α) 등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병행 추진

2) 광역경제권정책의 주요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 규정. 그렇지만 실제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광역적 사업은 아래의 사업으로 한정적임

- 선도산업 육성 : 광역권별 2개 (3년 0.9조원 + 2년 1조원)
 - 선도산업은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도 전략산업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표 1>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분야	프로젝트명	목표	핵심사업
New I 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계시장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 단말기용 초소형 정보저장 부품 개발 ■ 무선통신 단말용 디스플레이 부품 개발 ■ 융합통신용 고주파 부품 개발
	IT기반 그린반도체 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	그린 반도체 세계시장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실리콘 셀/모듈 개발 ■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개발 ■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 개발
의 약 바 이 오	기업 맞춤형 의약 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글로벌 라이선싱 거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분자/천연물 의약품 전임상 완료 ■ 생물의약품 전임상 진입 완료
	첨단신약 및 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세계 5대 바이오강국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분자/천연물 의약품 임상 단계별 완료 ■ 생물의약품 전임상/임상 단계별 완료 ■ 소재 제품화

- 거점대학 육성 : 선도산업별 1~2개, 연 2만명 양성 (3+2년, 5천억)

<표 2> 충청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인재양성센터

구 분	New IT		의약 바이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충남대학교
	E ² 반도체장비 인재양성센터	충청권 New IT 선도인재양성센터	SCH 의약바이오 인재양성센터	충남대학교 의약 바이오인재양성센터
목적	그린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개발 인재양성	충청권 New IT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	충청권 의약바이오 맞춤형 선도 산업 인재 양성 및 공급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의약바이오 인재 양성
예산(1차년도)	5,000백만 원	5,875백만 원	5,454백만 원	4,788백만 원
참여인원	교수 : 50명 학생 : 1,318명	교수 : 47명 학생 : 1,501명	교수 : 507명 학생 : 1,395명	교수 : 351명 학생 : 1,614명
협력기관	40개 기관	109개 기관	104개 기관	47개 기관

- 30대 선도프로젝트(SOC사업) : 도로, 철도 등 (5년간 50조원)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충청권 6개 사업 (2010년 540억)

3) 추진체계

- 제도 : 특별법과 특별회계 의한 지역발전정책 (광역경제권발전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5년 단위의 법정 중기 실행계획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예산 지원 (5년:161조 560억, 국비 91조 8천억)
- 추진체계 : 권역별 광역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광역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의 수립과 광역권내 시도가 협력사업의 발굴 및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의 관리 평가 등의 총괄적인 기능 부여

3. 광역경제권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 중앙의존적 정책수립과 집행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미비 ; 중앙의존적, top-down
 - 지역 주도하에 광역권별 또는 시도별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은 개별 중앙부처의 사업선정에 의존하고 있음.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앙부처에 의존

2)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조정권한 미흡

- 부처별 칸막이 행정, 예산 지원으로 인한 사업간 연계 미비
 - 통합적 예산(광특회계)이지만 각 부처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사업간 적극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개별사업화 추진되고 있음
- ⇒ 지역발전위원회, 광역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심의·조정기능) 부재
- 3차원적 지역개발정책의 통합화 미흡
 -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의 정책조정권한이 각각의 중앙정부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권역단위의 통합적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에 어려움

3) 광역추진기구와 지역추진체계와의 관계설정과 협력 부재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지역 추진체계와의 관계 설정
 - 기존 시도사업의 경우 정책기획과 평가와 관련된 시도 추진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구와의 역할조정이 필요
 - 광역추진체계 : 광역위원회, 선도산업지원단
 - 지역추진체계 : 각 시도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구 전략산업기획단)

4. 지속가능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제언

1) 정책제언

(1) 협력, 광역 대한 공감대 형성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자체간의 상호 협력적 공감대 조성
 - 중앙과 광역, 광역과 지자체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등의 3차원적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의 통합적 추진 및 상호 연계성 강화

(2)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화

- 부처별 예산의 통합화와 국고지원 원칙의 개선(포괄보조화 추진)

- 현재의 예산지원은 포괄보조형태를 띤 부처별 예산지원임.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지역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예산지원으로 순차적 전환
- 성과관리 중심의 자체적 평가체계로의 전환
 - 중앙중심의 평가체계를 지역중심의 자체 성과관리 평가체계로 전환
- (3) 광역경제권 단위의 분산-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 광역경제권단위에 적합한 추진체계 구축과 추진기구의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단계적 기획 및 재정권 부여 필요)
 - 대안 1 : 시·도 테크노파크, 선도산업지원단, 광역경제권위원회 등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로 전환 (산업정책 전담)
 - 대안 2 : 시·도 산업육성은 각 시·도 테크노파크가, 광역사업은 선도산업지원단을 통합한 광역경제권위원회가 전담 (시도산업-광역산업 육성의 이원화 추진)

2) 미래지향적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제언

- ※ MB정부의 광역경제권과 광역경제권계획(예산을 포함하는)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 지자체 차원의 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대안 2기준)
- (1) 충청권 자체적 자주재원 마련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현재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기반한 광역경제권계획은 실제로는 시도 전략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광역사업을 추진할 예산 부족
 - 공동세 도입, 지자체의 공동 출연 등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추진
- (2) 광역경제권의 신규사업 발굴·추진보다는 네트워킹 사업에 우선순위
 - 각 시도TP·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기업지원기능의 통합지원(이용)기반 조성
 - 항만, 공항, 철도의 접근성 확대를 통한 공동이용 및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 (3) 광역경제권위원회의 활성화 및 역할 정립을 위한 지원
 - 광역경제권위원회의 시도 예산지원을 통한 산업연구, 네트워크 사업 등 추진 지원
 - 시도(예산지원)→광역위(광역사업 연구·기획)→시도TP·기관·기업(사업추진)
- (4) 충청권이외 수도권(경기), 호남권(전북)과의 공동사업 발굴
 - 충청권 산업은 권역내보다는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아 수도권과의 정책연계가 필요